

## 國際化·世界化의 재인식

全相仁\*

### 국경없는 세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국경 없는 세계'가 시대적 추세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1980년에 토플러(Alvin Toffler)는 후기산업사회를 지향하는 「제3의 물결」속에서 산업사회의 핵심적 정치단위였던 국민국가가 쇠퇴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으며, 냉전체제가 붕괴한 다음 케네디(Paul Kennedy)는 「21세기를 위한 준비」라는 최근 저서에서 주권 및 국경 개념의 포기를 통한 세계화를 권고하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1980년대 말 사회주의 체제의 범세계적 몰락 이후 세계체계가 자본주의 일색으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국제적 교류는 나날이 확대·강화되고 있다. 특히 작년말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으며 기업 역시 국제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비

상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는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國民啓導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작금의 시대정신은 따라서 “국제화 아니면 퇴보 혹은 죽음”이라는 식이요, 세계화 테제에 관한 한 우리 사회는 異論의 여지를 배격하고 있다. 19세기 말 西勢東占하던 자본주의의 세계체계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亡國의 비운을 겪었던 우리의 역사는, 20세기 末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냉전 이후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위적인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국제화가 세계사적 대세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별 국가에게 부과하는 의미는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미국 Brown대학 사회학박사. 사회발전론 전공.

세계화 談論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자못 맹목적이고 추종적일 뿐이다.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누구의 국제화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세계화는 일종의 절대선 혹은 공동선처럼 계몽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국제화를 지향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부정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에 부응하고자 하는 정부나 기업의 절박한 노력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세계화 테제의 실체를 비판적으로 재인식하여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국제화 담론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입장을 재정립하자라는 것이다.

결론을 앞세운다면 세계화·국제화 논리에 바탕을 둔 주권 및 국가의 약화 명제는 우리 시대가 처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선택도, 유일한 방책도 아니다. '국경 없는 세계'라는 발상은 脫냉전기에 있어서 새로운 패권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방화 담론의 무비판적인 수용은 개별 국가단위에게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기회와 패배자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양면의 칼날 같은 것이다.

## 우루과이라운드와 국제화

돌이켜 보면 국제화·개방화가 우리나라에서 국민적 캠페인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8년 신년벽두였다. 그러나 그때는 서울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제적 시민의식을 계도하고 신장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었다. 그 반면 김영삼 정부가 선언하고 있는 세계화·개방화 시대는 1993년 말에 최종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란 多者間 貿易協商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1947년에 제정된 가트체제의 연장선에서 국제무역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기 위해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은 가트체제 출범 이후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 세계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지고 또한 국제적 무역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자 선진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 국제무역의 획기적 증대를 위한 새로운 '라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들의 동의 여부로 그 구체적인 일정이 연기되다가, 마침내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폰타 델 에스트에서 열린 가트 회원국 각료회의에서 다자간 무역협상 과정의 신설이 합의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루과이라운드는 결코 '날벼락 같은 재앙'이 아니라 이미 수년에

결쳐 예고되어 왔던 것이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가트체제의 최대 수혜국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국제화·세계화 담론도 당연한 선택에 대한 새삼스러운 강조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라운드가 우리에게 도전과 부담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다음 몇 가지 까닭에 연유한다. 첫째는 그것이 냉전 이후 세계경제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루과이라운드의 최종 타결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에 진행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그에 따른 세계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와 ‘우연히’ 중복됨으로써 불확실성과 불가예측성이 지배하는 무한경쟁의 틀 속에서 실험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세계화와 국제화 시대의 到來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소극적이거나 방관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실이다. 곧, 지난 6년 동안은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기와 ‘우연히’ 겹쳤는데,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드러나고야 말 우루과이라운드의 실체를 숨기기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셋째,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국제화 추세는 그 이전의 가트체제에 비해 내용면에서 훨씬 포괄적이라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가트는 공산품의 무역 거래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는 처음으로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농산물이 자국에서 차지하는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국제경제 질서는 과거와는 달리 波瀾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높다. 이에 덧붙여 가트는 창설 이래 ‘눈에 보이지 않은 상품’ 곧 서비스를 교역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나, 우루과이라운드는 최초로 서비스 무역을 가트체제 내에 수용했다. 세계적으로 서비스 산업이 규모나 속도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선진국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중을 고려한다면 기존 가트체제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일대 혁신을 이룩한 셈이다.

그렇다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세계화·국제화를 지향하는 국제질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많은 세계경제 전문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가 국제경제에 엄청난 자극을 줄 것이며 그 결과는 세계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나타날 것으로 밝게 전망한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를 선도해 왔던 미국이 그것으로부터 가장 적은 이익을 볼 것이라는 주장도 세계 유수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시되어 있다. 그 까닭은 미국이 최근 ‘보호무역’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쌀 개방 반대를 위한 농민 시위의 홍역을 치룬 뒤, 우리 정부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그것이 국가 경제의 60% 이상을 대외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에게 청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의 효과에 대한 예측은 시기상조일 뿐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아직 그 본격적인 실천 단계에 진입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격을 전후하여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는 세계경제의 통합화와 함께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국제화를 지향해 왔다. 생산력의 발전은 자본이 국경을 초월하는 현상을 방조하였고, 국제분업의 심화와 국민경제 간의 상호의존은 다시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력을 크게 제고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고도의 생산력 발전과 국제분업의 심화를 주도한 것은 초국적 자본이었다. 그런데 냉전 이후 정치·군사적 의미에서의 ‘식민주의’는 종식 단계에 접어드는 반면,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혹은 초국적 기업의 활동 영역은 더욱 확대·강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를 선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경제의 주요 활동단위가 국가로부터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듯한 것이다.

둘째는 국가 간의 지역적 통합 현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세계경제의 추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경제이기주의는 일정한 지역내 협정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 내지 극대화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이는 냉전기 미소 양극체제의 해체와 냉전 이후 미국 일극체제의 불안정화 및 그에 따른 다극체제의 형성이라는 국제관계의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널리 알려진대로 유럽통합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격을 전후하여 획기적으로 진전하였으며,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아시아권에서도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한 정상회담이 작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바 있다.

## 국제화 — 그 신화와 현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제화가 과연 실체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말을 바꾸어 언필칭 膾炙되는 ‘국경 없는 세계’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국가의 전통적인 역할과 기능이 국제화 추세와 함께 과연 소멸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작금의 사회적 및 국가간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국제화가 그 대안보다 반드시 더 우수한 방안인가에 대

해서도 관심을 할애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세계화 명제가 주어진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기보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의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신화 창출에 더욱 가깝다면, 그것은 실체 혹은 현실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담론으로서 비난받을 수 있고 또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국가 시대의 몰락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가장 흔히 지적되는 곳은 유럽연합의 전격적인 결성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국경 없는 유럽'이다. 그리고 많은 논자들은 유럽의 현재가 머지않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반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통합은 그곳 특유의 역사적 배경에 기초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의 주권 개념은 지정학적 안보를 미국에게 자발적으로 전가함으로써 흐려졌고 소련 역시 동유럽 국가들의 주권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탈취한 결과, 유럽 전체를 놓고 볼 때 국민국가의 강도는 전례없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유럽은 이미 1950년대 초에 통합을 위한 첫 걸음마를 시작할 정도였다. 또한 서유럽은 대부분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독교 문화가 압도적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는 곳이다. 게다가 1980년대 말미에 있었던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는 유럽의 지역공동체 형성 노력에 가일층 박차를 가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1991년 겨울에 체결된 역사적인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이 독특하게 갖고 있던 역사적,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걸음 더 나아가 직시해야 할 사실은 유럽의 통합조차 국경을 미처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는 '전체' 유럽국가들의 '공통' 이익을 추구하는 정신에 입각해 있는 바, 개별 국가들 간에 '비공통적' 이해가 존재할 가능성과 그들이 '비전체적' 이익을 선호할 개연성을 처음부터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정치적 통합과 군사적 안보라는 공동체의 두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까지 발전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징세와 소득분배, 복지, 외교정책 등은 모두 국가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의 모든 정당들도 그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 국경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유럽연합은 개별 국민국가를 훼손하는 것도, 단일국가를 지향하는 것도, 그리고 연방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편, 지역적 통합이 나름대로 모색되고 있는 북미나 아시아를 보면 국경 없는 미래는 유럽의 경우보다 더욱 더 요원하다. 더욱이 냉전 시기의 제3세계나 제2세계의 경우는 국민국가의 건설 자체가 아직도 사회적 목표로서 남아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미지역은 脫식민지화 과정이 진정한 국민국가의 발전으로 성숙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존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한 자리에는 새로운 국민국가의 출현을 목표로 한 민족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세계의 대부분 후진 지역은 脫근대 국제화로부터 연유하는 국민국가의 종언과 국경의 해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전근대적 혹은 근대적 과제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결국 유럽이 통합을 지향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서도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세계지도 전체를 펴고 볼 때는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경 없는 세계'라는 미래지향적 담론이 국민국가 시대가 안고 있던 사회적 및 국가간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더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이나 내전, 지배와 착취, 불의와 불평등 등의 문제가 국제화 추세의 강화에 의해 해소될 전망은 결코 밝은 편이 아니다.

'大도적'이 잡힌 다음 '좁도둑'이 증가하는 것처럼 지정학적 냉전이 해소되면서 국지적 분쟁과 위협은 유고와 소말리아 사태에서 보듯이 세계 도처에서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 무한경쟁을 지향하는 '국경 없는 세계'에서 '만국 對 만국'의 투

쟁을 방불케 하는 이른바 '흡스적 현상'은 더욱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적 경제 협력의 이면에서 사실상 국가 간의 분절이 심화되고 경쟁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세계화는 또한 기존의 제국주의를 지속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제적 경제 협력의 기치 아래 국경을 낮추고 제거함으로써 이익을 우선 챙기는 주체는 일단 선진국가의 자본이다. 순수히 경제학적으로 따진다면 국가 간의 경제 협력 그 자체에는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관심을 다국적기업들의 활동으로 돌리자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제화에 있어서 대표주자인 이들은 기실 어느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음으로써 쏠지구적 차원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국민국가와는 달리 초국가 기업의 존재 이유는 자본의 유동성에 근거한 이윤의 최대 확보이다. 그리하여 뒤에 남겨진 母國 혹은 그것이 활동하고 있는 현지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과 같은 사회 문제 등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덧붙여 초국가 기업은 많은 경우, 세계적인 환경파괴의 주범이면서 그 해결 작업에는 지극히 미온적이다. 그들은 엄격한 환경 규제를 피해 자본의 활동 무대를 계속 옮겨 다니면 그만인 것이다.

결국 국제화란 그 실체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물론 세계화의 추세란 존재한다. 그러나 ‘국경 없는 세계’가 손지구적으로 보편화하고 있다는 판단은 성급한 결론일 뿐이다. 그렇다면 국제화란 단지 신화일 뿐인가? 그렇다고 보기에는 실체의 객관적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세계화란, 따라서 개방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세계질서의 의도적인 구축 노력이다. 그러므로 세계화에 대한 이해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또한 다르다.

이와 같은 점에서 국제화란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갖춘 담론체계에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국경 없는 세계’ 논리는 이데올로기 부재 시대에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만큼 국제화 테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응도 무비판적이거나 맹목적이어서는 안된다. 주어진 주·객관적 여건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책적 처방으로 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 국제화 문제의 재인식

그러나 우리에게 보다 절박하게 다가서는 문제는 국제화에 대한 인식이 미처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남들과 더불어 국제화를 입으로만 외칠 뿐, 의식 구조와 행위 양식은 쇠국 마인드로 가득차 있다. 다시 말해 국제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세계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해야 하는지를 강구하고자 하는 성실한 의지와 개방적 태도부터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개방화 시대에 대처하는 국가정책은 서툰 시행착오의 연속이요, 국제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기업은 밖으로 돌기보다는 여전히 안에서 국가의 눈치를 보기에 바쁘다. 국민들 역시 계몽의 대상일 뿐, 국제화 시대의 세계시민이 진정으로 뜻하는 바에는 문맹이나 마찬가지다. ‘우물안 개구리’는 밖으로 나와도 개구리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제화 테제 앞에서 서성거리는 20세기 말 우리의 처지는 개방과 쇠국을 놓고 번민했던 19세기 말의 우리 역사를 재연하는 듯하다. 그리고 비록 결과에 있어서 민족적 좌절로 끝나기는 했지만, 당시의 방향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국제화 논리 앞에서 당파적이고 정략적인 이해 추구에 급급했던 당시 위정자들의 행각은 오늘을 위한 反面教師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국가적이고 민족적 차원에서 그 해결책과 대비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

제화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 국가와 국민이 결코 따로 놀아서는 안된다.

또한 현단계 세계정세와 국제적 분업구조 속에 처한 우리의 위상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분명히 우루과이라운드는 전형적인 무역국가인 우리에게 새로운 好機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진국인 우리에게 새로운 시련이 될 수도 있다. 19세기 말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개화를 주장하던 세력들은 당대의 근대 서구思潮 가운데 社會進化론을 신봉하면서 개방을 통한 근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은 쇠국론에 못지 않은 착각이었다.

개방화에 의한 무한경쟁원리는 얼핏 보아 공정하다. 그러나 동일하지 않은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세론에 입각하여 국제화에 대해 낙관론 혹은 비관론을 개진하는 것은 둘다 우리에게 금물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안별 접근이요 단계적 대응일 뿐이다.

끝으로 오늘날의 국제화 논리 및 요구에 쉽게 편승하는 일은 새로운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투항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19세기 말의 우리 역사가 세계화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강제적으로 식민지화의 비운을 겪었던 경험과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서구에서 발원한 국제화 논리는 따지고 보면 국제적 弱肉強食 논리를 보기 좋게 잘 포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그러한 발상의 최대 함정은 淘汰의 이론적 합리화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도태의 대상이 되어서는 물론 안될 일이다. 그러나 용케 우리가 국제화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국제주의는 우리가 약육강식의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되지만 그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역사에는 교훈이 있는 것일까♣